



주간 통일정세

2012-0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일 경제건설에 '만리마(萬里馬)' 찬양(1/30, 노동신문)**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해온 각종 경제건설사업에 대해 '만리마(萬里馬) 속도'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찬양하고 나섰다고 노동신문이 30일 전함.
 - 북한이 비약적인 생산 속도를 뜻하는 '만리마'란 용어를 동원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각 산업에 대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신문은 김일성경기장,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빙상관, 평양산원, 창광원, 청류관, 서해갑문, 5월1일 경기장, 평양제1백화점,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창광거리, 문수거리, 청춘거리, 광복거리, 평양고려호텔 건설 등을 김 위원장 업적으로 거론했음.

- **김정은, 공군 제1017군부대 시찰(1/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은 부대 지휘소에서 비행훈련을 참관하고 새로 제작한 전투기술 기재와 군사대상물들을 돌아봤고, 이어 군부대장인 허룡의 가정을 방문해 집안을 둘러보고 허룡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이날 현지에서 리병철 공군사령부 사령관과 군부대 지휘관들이 김 부위원장을 맞이했음.

- **北최고사령관 김정은 1월 내내 軍관련 공개활동(1/3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뒤 1월 한 달 동안 벌인 14건의 공개활동 가운데 10건이 군 관련 단위 시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1일 연합뉴스가 파악한 결과, 지난 1일 '근위서울류경수 105탱크사단' 방문으로 군부대 시찰을 시작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169군부대, 공군 354군부대, 3870군부대, 671대연합부대, 공군 378군부대, 서부지구항공구락부, 공군 1017군부대 등 군부대 8곳을 시찰했음.
 - 여기에 군간부 양성소인 만경대혁명학원 방문과 인민군 군악단 연주회 관람을 포함하면 총 10건의 군 관련 공개활동을 펼친 셈임.



- 나머지 4건의 공개활동 중에서도 김 부위원장이 11일 시찰한 건설현장은 군부대가 공사를 맡은 곳이고, 다른 2건만 일반공연 관람이어서 사실상 김 부위원장이 1월 한 달 동안 거의 군부대만 찾아다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北회담신사' 김령성 민간교류로 권토중래?>(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려 조직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김령성'을 위원장으로 언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북측 단장을 맡은 김령성 위원장은 2001년 9월 제5차 회담부터 2004년 2월 제13차 회담까지 총 9회에 걸쳐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으로 나타났음.
 - 1944년생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그는 회담 때마다 사자성어를 섞어가며 빼어난 말솜씨를 과시해 남측에서 "혹시 남측 대표가 아니냐"는 농담조의 얘기까지 듣기도 했음.
- 北총리, 고려성군관 교사 건설현장 시찰(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가 지난 2일 개성에 있는 고려성군관의 새 교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 고려성군관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군관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경공업 분야 종합대학으로, 수년 전부터 새 교사 건설공사가 진행 중임.
- "北 김정은, 작년 아이패드 주문 지시" < NHK > (2/3, 일본 NHK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작년에 아이패드2를 들여오도록 지시하는 등 최신 전자기기에 큰 관심이 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3일 보도
 - 이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작년 봄 애플사가 아이패드의 신형 모델인 '아이패드2'를 발표했을 때, 이를 즉시 평양으로 들여오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北총리, 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시찰(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3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생물공학분원은 첨단 조직배양기술로 '키낮은 사과나무모'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군용 쌀 일부 주민에 배급 지시"(2/4,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직후인 지난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였던 군용 쌀 일부를 다시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여 저장해둔 군용 쌀인 '헌군미(獻軍米)' 약 50만t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북한 당국자는 "주민에 대한 군용 쌀 배급량 등을 군 간부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개혁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 **北, 김정일 생일 맞아 '김정일훈장' 제정(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주년 생일을 맞아 지난 3일 '김정일 훈장'을 제정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령에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국가건설 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일꾼(간부)과 인민군 장병, 근로자, 군부대와 기관·기업소, 사회협동단체를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해 김정일 훈장을 제정한다"며 "김정일 훈장은 김일성 훈장과 함께 우리나라(북한)의 최고 훈장"이라고 밝혔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같은 날 정령을 통해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도 제정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정일 사후 첫생일 준비에 北 '들썩'〉(종합)(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준비에 벌써 한창이며, 그의 생일까지 아직 11일이나 남았지만 북한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이상화와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북한 매체는 지난달 28일 양강도 청년전위들이 백두산 밀영에 있는 김 위원장의 고향집을 답사하려고 혜산을 출발했다고 전한 이후 조선인민내무군, 철도성, 전국직업동맹 등의 수많은 답사대가 이곳을 찾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음.
- 특히 올해 답사자들은 김 위원장의 유훈을 받들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모임을 하고 있음.
- 북한은 이달 14~21일 평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제16차 김정일화(花)축전'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주제가 '김정일화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우리 장군님'인 축전은 과거에 비해 규모와 형식, 내용에서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북한 매체의 설명임.



■ 김정은 동향

- 1/31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 시찰(1.31, 중통·중방)
- 김정은 부위원장을 현지에서 공군사령관인 이병철 대장이 맞이하였으며, 동행자는 未언급
- 2/5 김정은 부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 사임하게 된 것 관련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온 '후진타오' 중국 주식 등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2.5,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2월! 김정일 위원장 생일(2.16, 광명성절) 70돌을 앞두고 '김정일 찬양' 일색 글 및 관련행사 등 '2월의 명절 분위기' 고조
- 김영남, 2.2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집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이사장과 일행을 만나 담화(2.2, 중통·평방)
- 리광근(北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前 무역상), 관계부문 일꾼들 참가
- 최영림 내각총리, 2.2 고려성균관 새 교사 건설정형 현지 요해(2.2, 중통)
- 총리는 관계부문 일꾼들의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개성시민들에게 필요한 석탄과 전기를 보장해주기 위한 해당한 대책들 강구
- 최영림 내각총리, 2.3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사업 현지요해(2.3, 중통)

나. 경제

● 北, 노동·재정 등 '외국인투자법' 개정(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은 노력(인력)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과 휴식,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 8개 장 51개 조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 또 10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과 4개 장 59개 조로 이뤄진 외국투자기업회계법도 개정됐다고 전했다.
- 통신은 작년 3월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 법을 설명하면서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 <北 '자본주의 상징' 인터넷뱅킹도 도입?>(1/31 김일성대학보; 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발간된 김일성대 학보에 실린 '망은행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사실상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은행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전하면서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 보이는 망(網)은행을 논문은 '전자은행'이라고 설명했다.
- 논문은 망은행 특성에 대해 "국가의 금융질서를 강화하고 기관, 기업소들과 거래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은행 원가 절감, 업무 발전 촉진, 업무의 안전 및 인증기술의 진보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 북한이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며,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공격받았던 신용카드는 1990년대부터 북한에서 사용돼왔다.
-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5년 말 기준으로 평양에서는 36개소의 카드 가맹점이 운용됐고, 2003년에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chollima-group.com)도 개설됐음.

● 작년 북중교역액 56억 달러...전년비 62%↑(1/31,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는 총 56억2천만900만 달러로 전년도 34억6천400만 달러에 비해 6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1일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간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2월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총 31억6천500만 달러, 수입은 총 24억6천400만 달러로 집계됐음.
-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38.9%, 107.4% 증가한 것이며, 북한의 대중 수출규모가 급증한 것은 석탄·철광석 등 광물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으며, 북한이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주로 원유였음.

● 유니세프 대북지원예산 9% 증액...2천200만 달러(1/31,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대북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200만 달러(9%) 늘린 2천24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31일 전함.
- 유니세프 '2012 인도주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구는 올해 북한 영양지원 사업 930만 달러를 비롯해 보건사업 562만 달러, 식수·위생사업 642만 달러, 교육사업 100만 달러를 각각 책정했으며, 작년에 비해 교육, 식수·위생사업 예산은 줄었지만, 영양사업 예산은 362만 달러 늘고 수혜대상도 630만 명에서 1천6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함.



- **北 경제개방하면 연평균 12% 급성장(2/2, 연합뉴스)**
 - 국제금융센터가 2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합류할 경우 과거 한국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음.
 - 현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동참한 것이며 이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임.
 - BOA 메릴린치는 북한의 경제개방 시 수년간 10~12% 급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경우 40년 뒤에는 남북 간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가 현재의 40배와 19배에서 3.2배와 1.8배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음.
 - 북한의 개방경제체제 도입이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전면 개방이 아닌 중국식 부분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

- **北 25년간 재난 손실 240억 달러<벨기에>(2/2, 자유아시아방송(RFA))**
 - 1987년 이후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사고로 최소 2천700여 명이 사망하고 24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재난 관련 연구소 통계를 인용해 2일 전함.
 -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는 이 기간 북한이 국제기구에 신고한 자연재해 중 10명 이상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에 피해를 준 재해는 홍수 20건을 포함해 총 28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재난역학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홍수는 2000년 이후 발생횟수가 늘어 지난 25년 동안 발생한 대규모 홍수 10건 중 5건이 2000년대 들어 발생했음.

- **北 서비스업 유치 적극...패스트푸드점 늘어(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상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함.
 - 방송은 대북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싱가포르의 비영리단체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의 제프리 시(Geoffrey K. See) 회장이 북한 전문가들이 만든 인터넷잡지 '38north'(http://38north.org)에 기고한 글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음.
 - 시 회장은 기고문에서 평양에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프라이드 치킨집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이 늘어나고 한산하던 도로의 교통량도 많아졌다고 전했음.

- **北, 리광근 합영투자위원장 임명 확인(종합)(2/2, 평양방송)**
 - 북한의 리광근 전 무역상이 외자유치 창구인 합영투자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2일 확인됐음.
 - 평양방송은 이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이집트 통신 재벌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콧텔레콤 회장 일행과 환담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에는 합영투자위원장이 광근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음.

● 사회주의 北 '광고 중요성' 이례적 언급 눈길(2/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153호(2011년 10월30일 발행)는 '수출무역에서 광고의 역할'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실었음.
- 경제연구는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간하는 경제분야의 대표적 학술지로, 북한의 경제 관련 정책 등을 주로 소개
- 잡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대외무역에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고 상품 수출을 결정적으로 늘여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지린성, 北과 교통·자원·관광협력 강화(2/5, 중국신문망)

- 중국은 라선특구를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5일 보도
-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는 이날 폐막한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린성 왕루린(王儒林) 성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북한과 교통설비, 자원개발, 국경관광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라선경제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라선개발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와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지린성과 라진시는 작년 '북·중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개발계획 기본 협약을 체결했음.

■ 기타 (대내 경제)

- 北,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 수정·보충(1.30,중통)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은 노력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과 휴식,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 8개장, 51개조로 구성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10개장, 72개 조)과 외국투자기업회계법(4개장, 59개 조)도 개정



다. 군사

● 북, 김정일 사망전부터 군사퍼레이드 준비(1/30,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부터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
-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북한이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이 연습은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부터 진행돼온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이 장기간 퍼레이드 연습을 하는 것으로 미뤄 김일성 생일 100주년(4월15일)과 인민군 창건 80주년(4월25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분석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 北 김정은, 친위대 1호 승계...수만명 규모(2/5, 산케이신문)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위대를 인계받았으며 수만 명 규모라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김정은은 '1호'라고 불리는 최정예 친위대를 인계받은 외에 고모인 김경희를 경호하던 친위부대인 '2호'도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가 된 김정은을 경호해왔음.
- 친위부대인 1호와 2호는 조선인민군 지도명령 계통에서 독립된 군 조직인 호위사령부에 소속돼 있지만, 조선노동당에서 인사권을 잡고 있는 조직지도부의 관리하에 있음.

● 북, 美고속표적기 도입..무인공격기 개발 중(2/5,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에서 생산된 고속표적기를 도입해 무인공격기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군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최근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MQM-107D'(스트리커) 여러 대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무인공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 북한은 고속표적기에 고폭탄을 장착해 수차례 시험을 했으나 아직은 완성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미군과 우리 군이 사용하는 고속표적기인 MQM-107D는 유도탄의 시험 발사 때 공중 표적기로 활용되고 있으며, 길이 5.5m, 날개 길이 3m, 최대속력 925km/h로 상승 고도는 1만2천190m에 이릅니다.

라. 사회·문화

● 평양민속공원 4월 김일성 생일 맞춰 개장(1/30,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평양민속공원의 현장공사사가 90% 진행됐다고 하며 올해 4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을 맞아 개장한다고 전했다.
- 평양민속공원은 2008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



- 강성국가 진입에 맞춰 추진된 국가적 사업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1일 새해 첫 경제시찰 장소로 이곳을 찾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려여행사 "호텔객실 부족해 4월 북한관광 제한"(1/31,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는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4월에 북한 관광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고려여행사는 홈페이지 최근소식란에 북한 내 호텔의 객실 부족으로 4월7일~20일 북한 관광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15)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北축구팀, 中서 한국경기 거부..남북교류 급제동(1/31, 연합뉴스)**
 -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주최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린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4) 축구대회'에서 북한 4·25축구단 유소년팀은 이날 인천구단의 유소년팀인 광성중학교와의 경기를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4·25유소년팀은 이날 광성중과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하다가 감독의 철수 지시에 따라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전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100만명 돌파(2/2, 카이로블룸버그; 연합뉴스)**
 -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2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 오라스콤 텔레콤은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일행이 방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으며,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했음.
 -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2011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453개 기지국을 통해 평양과 14개 주요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中단둥, 북한관광 재개...외국인 급증(2/3, 요녕신문)**
 - 북한 신의주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관광이 재개됐다고 조선족 매체 인터넷 요녕신문(遼寧新聞)이 3일 보도
 - 이 신문은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단둥국제여행사가 지난달 26일 3박 4일 일정의 북한 관광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광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 단둥에서 북한 관광이 재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애도 기간이 정해져 대북 관광이 끊긴 지 한 달 만이며, 올



해 북한 관광에는 홍콩과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온 관광객의 참여가 부쩍 늘었다고 단둥국제여행사는 전했다.

● **北도 스마트폰 앱 기술 개발 박차(2/4, 연합뉴스)**

-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용 응용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 이날 연합뉴스가 확인한 데 따르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에 지난달 29일 올라온 '북한의 스마트폰을 위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북한 과학자들은 그동안 북한에서는 생소했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소개했다.
- 동영상에서 북한의 최혁철 교수는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드로이드폰을 조국(북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동영상은 북한에서 지난해 10월27일 개막된 '제22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됨.

● **'김일성 100돌 관광' 北테마상품 잇따라 출시(2/4, 연합뉴스)**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 여행사들이 오는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앞두고 '테마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음.
- 5일 스웨덴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월~10월 북한지역 단체관광을 총 19번 실시할 예정이며, 4~5일짜리 상품 가격은 1인당 1천100~1천200유로(161만~176만원)임.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도 4월 중순을 전후해 4 종류의 단체관광을 실시할 계획이며, 3~14일짜리 상품 가격은 1천190~2천890유로(133만~323만원)임.

● **북한 식당 유럽에 첫 개업.. "서방과의 가교"(2/4, 연합뉴스)**

- 유럽 최초의 북한 식당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문을 열었음.
- 네덜란드의 호텔 사업가 렘코 헬링만 씨와 렘코 반 달 씨가 북한과 합작해 지난달 28일 문을 연 이 식당의 공식 명칭은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레스토랑'이며, 현지 사업면허엔 네덜란드인이 사장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합작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력은 북한 당국이 파견한 운영 책임자 한명희(韓明姬) 씨와 주방인력 4명 등 모두 9명인 종업원은 북한 사람들임.

● **기록적인 한파에 전력난까지...北주민 이중고(2/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주민들이 최근 35년 만에 찾아온 한파에 최악의 전력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5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평양의 경우 지난 1, 2일 기온이 예년보다



- 푹 떨어져 1977년 이후 35년 만에 최대 한파를 기록했으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일 평양의 낮 최고기온이 영하 12.3도로 평년보다 11.6도 낮았고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7도로 평년보다 7도 낮았음.
- 평양 주재 한 외교관은 최근 메일을 통해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 이 외교관은 "최근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공급되는 전기가 자주 끊기고 전압도 불안하다"며 "평양의 전력사정이 이처럼 열악해진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美, 北에 남겨진 식량 2만t 반환 요구(2/5, 교도통신)**

- 미국이 과거 식량 지원 과정에서 북한에 남겨둔 식량 2만t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5일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과거 식량 지원 과정에서 지난 2009년 북한에 인도하지 않은 채 남겨둔 식량 2만t의 반환을 요구했음.
- 미국은 지난 2008년 5월, 북한에 50만t의 식량 지원 의사를 표명한 후 2009년 3월까지 17만t을 지원했음.
- 하지만, 북한은 2009년 3월 당시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북한에 도착했으나 인도되지 않은 채 남겨진 2만t의 식량은 현재 행방이 불투명함.
- 미국은 작년 북한에 비스킷 등 영양보조식품을 매월 2만t씩 24만t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만t의 식량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규 지원분에서 상쇄해 22만t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조건을 북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평양민속공원, 김일성주석 생일(4.15, 태양절) 즈음 개장 발표(1.30, 조선신보)
 - 민속공원은 대성산기슭에 약 200여 정보(1정보=3,000평)의 부지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北의 역사적 창조물들을 재현
- 이집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이사장('나기부 싸 위리쓰') 일행, 21 평양 도착 및 김일성父子형상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 진정(2.1, 중통 · 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中, 북한에 식량 50만t · 원유 지원(1/30, 도쿄신문)**
 -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식량과 원유의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
 -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 ·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고 지원 규모는 식량이 50만t, 원유가 25만t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으며,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긴급 식량 · 원유 지원은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하루 후인 작년 12월 20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재한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임.
- **北, "美 새 국방전략으로 세계 제왕 행세"(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 "미국은 21세기를 이른바 '미국의 태평양세기'로 만들어 세계의 제왕행세를 하려하고 있다"고 비난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세기'는 본질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판본"이라며 이같이 비난
- **불법무기 운송 적발 北선박수 세계 4위(1/31, 미국의 소리방송(VOA))**
 - 지난 20년간 무기나 마약 등을 불법 운송하다 적발된 선박 가운데 북한 국적 선박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인용해 31일 전했다.
 - SIPRI가 전날 발표한 '불법 해상수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무기나 마약 등을 불법운송하다 적발된 선박 가운데 북한 선박이 4.8%로 독일(19.5%), 그리스(10.6%), 미국(7.8%)에 이어 4위로 많았음.
 - 보고서는 북한이 항로 우회, 복수의 항구와 선박 이용, 적하목록이나 신용장 허위 기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추적을 따돌리는 시도를 계속해왔다고 전했다.
- **日서 '복송 일본인 처' 귀국 추진단체 설립(1/31, NHK; 일본 TBS)**
 - 1950~1980년대 재일동포들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뒤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른바 '복송 일본인 처'의 일본 귀국을 추진하는 단체가 설립됐다고 NHK와 TBS 등 일본 방송이 31일 보도
 -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 일본 이민정책연구소장과 스위스에 본부



를 둔 국제 이주문제단체인 국제이주기구(IOM)의 관계자 등은 30일 오후 도쿄 미나토(港)구에서 모여 '일본인 처 등 정주지원센터'를 발족시켰으며, 이 단체는 앞으로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나 해방 후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을 일본에 돌려보낼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맞을 시설을 일본에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 **美DNI "김정은, 무기수출 계속할 것"(종합)(1/31, 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무기시스템 수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획득, 공급 등을 의미하는 '확산(Proliferation)'이 글로벌 위협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한 뒤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의 확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日, 자체 인정 '납북피해자 수' 확대 시사(2/2, 요미우리 신문)**

-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특정실종자) 20명을 '준(準) 인정' (피해자) 정도로 지정하겠다는 뉘앙스를 (북한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 특정실종자는 이들 외에 민간단체(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납북됐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약 470여명에 이르며, 마쓰바라 담당상의 발언은 이 중 20명 정도를 납북 피해자 다음 등급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됨.

● **캐나다, 작년 탈북자 117명 난민 인정(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지난해 한 해 탈북자 117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 캐나다 정부의 탈북자 난민 인정은 2007년에 1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7명, 2009년에는 65명으로 늘었으며, 캐나다로 인도된 탈북자 수도 2008년 31명, 2009년 44명, 2010년 17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1년에는 385명으로 전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1.30)】 美 국방전략 발표 관련 '미국의 태평양세기는 본질상 아-태지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美 대외정책의 새로운 판본'이라며 '새로운 냉전의 위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재차 주장(1.30, 중통/미국의 태평양세기와 조선반도)



나. 6자회담(북핵)

● 임성남 "北,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여"(2/3, 연합뉴스)

- 우리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임 본부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정일 사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지원과 관계 정상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옳은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성남 방러..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2/5, 연합뉴스)

-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임 본부장은 신임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쿨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문제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5일 밝혔다.
- 임 본부장은 이고리 이바노프 전 러시아 외교장관 및 현지 한반도 전문가 등도 만나 북한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 대남정세

● 6·15 남북실천위, 내달 초 中서 실무접촉(1/30, 연합뉴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는 2월 초 중국 선양에서 남북교류 재개 등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남측위가 30일 전했다.
- 남측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27일 북측위로부터 실무접촉을 진행하자는 답신이 옴에 따라 다음달 9일과 10일 사이에 선양에서 접촉을 진행할 것"이라며 "통일부와 실무접촉 성사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측위는 지난 27일 북측에 보낸 팩스를 통해 "남북교류 재개와 올해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월 초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6·15민족공동위의 단합과 정상화 문제,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탈북자 2명 추가 채용..총 17명 근무(1/31, 연합뉴스)**
 - 경기도북부청은 탈북자 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31일 밝혔으며, 이들은 경기도북부청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도내 북한 출신 공무원은 이번을 포함해 총 17명이 됐으며 도청에 4명, 시·군청에 13명이 근무 중임.
 -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 통합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탈북자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 **6·15선언 북측위 "남북단체 연대 활성화해야"(1/31,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는 이날 평양에서 총회를 열어 '해내외(국내외) 전체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올해에 북과 남의 각 계층별, 부문별 단체들 사이의 통일회합과 연대활동을 더 활발히 벌여 나가자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가 민간단체 교류를 강조하면서도 남측 정부를 비난한 것은 당분간 대남정책에서 '통민봉관(通民封官)'의 기초를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이날 총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명예공동위원장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로두철 내각 부총리·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과 범민련·범청학련 북측 관계자들 참가

- **류우의 "北고분군 병충해 지원 적극 검토"(2/1, 연합뉴스)**
 -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일대 소나무 숲에 대한 병충해 방제작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동명왕릉 주변 나무가 병충해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면서 "왕릉 주변 병충해 방지(지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탈북자 훈련' 하나원장 직급격상에 北 맹비난(2/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총책임자 하나원장의 직급을 격상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북한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일 '격상놀음에 비긴 추악한 속통'이란 글에서 "리명박 역도의 반통일돌격대로 규탄과 배격을 받아온 통일부 패당이 저들의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 한다"며 "이번 '하나원장'이란 자의 고위공무원 격상놀음은 바로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비난

- **개성공단 北근로자 5만 명 돌파(2/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일 "북측이 지난달 26일 449명을 추가로 공급했다"면서 "이



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5만3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들 가운데 여성이 7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 9.5%, 전문학교 8.7%, 고졸 81.8% 등 전원이 고졸 이상이며, 이직률이 극히 낮고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개성공단이 북측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 '김정은의 北' 남측 당국 배제 노골화(2/1,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측 당국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이른바 '통민봉관'(通民封官)으로 불릴 수 있는 이 같은 기조는 이미 예견돼 있었으며,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 태도를 문제 삼아 "남측 당국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 주목을 끄는 것은 인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주최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린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4) 축구대회'에서 북한 4·25축구단 유소년팀이 지난달 31일 인천구단의 유소년팀인 광성중학교와의 경기를 거부한 대목임.
- 북측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몸까지 풀었으나 돌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북한팀 한 관계자는 최근 남북교류 중단을 선언한 북한 당국의 방침을 어길 수 없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지원단체 모임 북민협 신입회장에 인명진(2/2, 연합뉴스)

- 국내 51개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를 신입 회장으로 선출했다.

● 北, 南정부 조문태도 사죄 요구...공개질문장 발표(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 태도를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 국방위 정책국은 공개질문장에서 "남조선당국이 제 입으로 북남대화 재개와 관계개선을 바란다고 광고한 이상 다음과 같은 공개질문에 명백히 대답할 것을 촉구했다"며 9개 질문사항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공개질문장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돼있는가"라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이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라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 이어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 "우리를 과녁으로 삼고 벌이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는가"라며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더 이상 문제삼지 말 것과 각종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했음.

- 이밖에 공개질문장은 ▲대북심리전 중지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호응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용의를 묻는 내용을 담았음.

● **美국적자 3인 김정일 사망시 MDL넘어 조문방북(2/3,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미국 국적의 한인 3명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조문 방북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음.
- 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이사, 워싱턴타임즈 주동문 회장 등 3명은 지난해 12월24일 경 의선 쪽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음.
- 정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문 방북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파장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리선권 대좌 "남측과 대화 용의"(2/3, 평양 AP통신)**

- 북한은 남한이 몇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즉시 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북측 리선권 대좌(대령급)가 2일 미국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 리 대좌는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일하며, 지난해 2월 판문점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예비)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단장)를 맡았던 인물임.
- 그는 남측에 대해 "정말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는지 세계에 공표하라"고 말했으며,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면담 직후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 있다. 한미 양국은 그 길이 서울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왔음.

● **北조평통 키 리졸브 연습 비난..."총선 승리 술책"(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4일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맹비난했음.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의 전쟁연습책동은 남조선 민심과 여론의 불만을 탄 데로 돌리고 보수세력을 규합해 당면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무난히 치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군사적 도발로 상대를 자극해 맞대응으로 번지면 침략의 불을 지르는 것은 호전광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연평도 포격사건도 그러한 침략적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타 (대남)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 1.31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노두철(내각부총리), 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류미영(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김령성(보고/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장)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 등 참가자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31, 중방·중통)
- '韓美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주장 및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으로 대답해 나서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위협(2.1, 평방·민주조선/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
- 【北 국방위 정책국 공개질문장(2.2)】 南北대화재개 및 관계개선 관련 9개 항목의 공개질문장을 내고 "명백히 대답할 것"을 촉구(2.2, 중통·중·평방)
 - ①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사죄할 결심이 있는가 ② 6.15·10.4 선언을 전면 이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 ③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결코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 ④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는가 ⑤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 있는가 ⑥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⑦ 북남협력과 교류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 ⑧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데 대한 원칙적 요구에 호응해 나설 수 있는가 ⑨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악법들을 즉시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 국방위 정책국 일꾼들(이선권·홍석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명백한 대답"을 요구하며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열을 막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김정은동지의 의지'라고 주장(2.2, 중통)
- 北 「조평통」 대변인, 2.4 韓美의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 및 군사적 움직임(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 서명 등)은 '위험한 불장난, 總選 술책'으로 왜곡 및 "파멸과 죽음뿐"이라고 위협 담화 발표(2.4, 중통·중·평방)
- 北 국방위 정책국의 9개항 '공개질문장'에 대한 통일부의 발언(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 "이00패당은 여론에 귀를 막고 진실을 부정하면서 부질없는 입놀림으로 신세를 더욱 망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2.5, 우리민족끼리/정통을 찢리운 자들의 어리석은 대꾸질)
- 통일부장관이 조찬강연회(2.1, '민화협' 주최)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호소문(민간급 통일회합 제의, 1.31)'과 관련한 발언(민간단체의 정치적 활동자제를 당부)을 "통민봉관 공세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문제를 역적패당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2.5, 우리민족끼리/민족의 운명문제를 역적패당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미일, 北 김정은 체제 '안정적' 평가(1/31)

-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당국자들은 31일 회담을 갖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과 피터 라보이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30일부터 이틀동안 제주도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그같이 평가했다고 군 고위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권력장악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북한 권력 내부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내달 말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이 기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 3국이 긴밀한 대북 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신(新)국방전략지침을 설명하고 대(對) 아시아정책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은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예산 및 병력감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 전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재난구조와 인명구조 상호 지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안보상황 등을 논의했다"면서 "3국 국방당국자간 회담이 정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성남 내주 방러..6자 재개방안 논의(1/31)

- 우리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함. 정부 당국자는 31일 "신임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쿨로프 차관과의 상견례차 내주 중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러시아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임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정체된 6자 회담 재개 흐름을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이런 차원에서 임 본부장은 러시아를 통해 "대화 재개의 길은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분석됨.
-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부 문제가 주된 이유가 돼 현재 대화가 중단된 것



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대화가 재개돼 북미 협의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6자 회담 재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임 본부장은 방러에 앞서 다음 달 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국 동아태 차관보와 만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캠벨 차관보는 한·미 친선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창립 55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방한함.

● 캠벨 "北, 회담재개의 길 열려 있다"(2/1)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일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회담재개와 관계개선의 길이 열려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양국은 그 길이 서울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 그는 "오늘 면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 필요성과 그 공동성명의 핵심목표인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일체의 핵무기와 기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관계국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캠벨 차관보는 6자회담이 상반기 중 재개될 수 있다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 있다"며 "그러나 (6자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들이 있고 이와 관련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미일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3자 협의를 수개월 내에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이란제재와 관련 "(한국측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새로운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미국 정부는 이란제재 법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제재는 이란에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핵심국가들(key countries)과 긴밀히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캠벨 차관보는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조찬을 함께 하며 오는 3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준비 상황과 한반도 주변 정세,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동참 범위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오후 방한한 캠벨 차관보는 같은 날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으며,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출국함.

● 美-러, 모스크바서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2/1)

- 러시아와 미국 대표들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과의 협의를 위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북핵 6자회담 특사 등이 하루 전 모스크바에 도착했음. 미국 대표단은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무차관 등과 만날 예정임.

- 러시아 외무부 소식통은 "이번 회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온 실무협의"라며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가 핵심 협의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미-러 회동은 북한에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김정일 사망으로 중단됐던 회담 재개 방안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 주목됨. 이와 관련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임.
-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북핵 6자 회담이 올 상반기 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 임성남 "北,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여"(2/3)

- 우리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음.
- 임 본부장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정일 사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경제지원과 관계 정상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옳은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그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핵안보 문제를 다루는 회의로 북핵문제를 정식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별도 계기로 (관련국과)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음.

● 임성남 방러..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2/5)

- 우리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 6자 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함. 임 본부장은 신임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핵문제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5일 밝혔음.
- 임 본부장은 이고리 이바노프 전 러시아 외교장관 및 현지 한반도 전문



가 등도 만나 북한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스웨덴 학자, 北 2010년 '핵실험' 주장"(2/5)

-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2010년에도 소규모 핵실험을 두 번 더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3일자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 스웨덴 국방연구청의 대기과학 전문가 라스 에릭 데 예르가 이런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음.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핵실험을 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음.
- 데 예르는 지난 2010년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비공식 핵문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된 한국이 측정된 방사성동위원소 자료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국제 감시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1년간 추가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음.
- 당시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음. 방사성동위원소 제논-133과 이 원소에 비해 에너지 상태가 높아 '준안정(metastable)' 형태로 불리는 제논-133m의 비율을 볼 때 2010년 4월 중순께 인공적인 폭발이 발생했다는 게 데 예르의 설명임.
- 또 제논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만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바륨-140과 이 원소의 방사성 붕괴 결과물인 란타넘-140의 비율을 검토한 결과 2010년 5월 11일을 전후한 시점에도 인공적인 폭발이 있었다고 그는 밝혔음. 폭발 규모는 고성능 폭약 TNT 50~200t을 터뜨린 것과 같은 정도라고 데 예르는 덧붙였다.
- 나아가 그는 이 '실험'이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이용해 핵분열의 파괴력을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논리를 폈음. 일부 고성능 핵탄두에서는 폭발이 시작되면 함께 장치된 중수소나 삼중수소에 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의 '수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 방법을 실험했을 수 있다는 것임.
-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모두 수소의 동위원소로, 양성자 1개와 전자 1개만으로 구성되는 일반 수소와 달리 중수소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1개가, 삼중수소는 양성자 1개에 중성자 2개가 각각 원자핵을 구성함.
- 네이처는 북한이 2010년 5월 12일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물론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비웃음만 샀던 당시 발표가 데 예르의 이번 주장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풀이했음.
- 그러나 데 예르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미국 프린스턴대의 물리학자 프랭크 본 히펠은 방사성동위원소 자료들이 무기용 핵실험이나 융합 반응을 이용한 폭발성능 강화 실험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데 예르가 주장하는 시점에 핵실험으로 인한 지질학적 진동 현상이 감지되지 않은 점 또한 해명해야 할 부분임.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에서 수년간 활동한 지구물리학자 올라 달먼은 감시망이 촘촘한 한반도 일대에서 만약 핵실험이 있었다면 "뭔가가 감지됐어야 했다"는 견해를 보였음.
- 미 몬터레이 국제문제연구소의 핵무기 비확산문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역시 방사성동위원소의 감시체계만으로는 핵 관련 사고인지 혹은 원자로 사고인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며 데 예르의 주장이 "나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고 밝혔음.
- 데 예르가 2010년 8월 빈 회의에서 검토한 CTBTO의 방사성동위원소 측정 자료가 비공식 집계라는 점도 문제라고 CTBTO의 자료 담당자가 지적했음.
- 결국 데 예르의 주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전문가 집단의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데 예르의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스 앤드 글로벌 시큐리티' 4~5월호에 게재될 예정임.

나. 미·북 관계

● <롬니, 세계 최악의 인물 중 하나에 김정은 지목>(1/30)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9일 (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등과 함께 세계에서 최악의 인물로 손꼽았음.
- 롬니는 이날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이틀 앞두고 마이애미 인근 도시 하얏리아에서 가진 유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유약하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지금 우리에게서 카스트로, 차베스, 그리고 아마도 김정은과 같은 세계 최악의 인물들과 타협하고 이들을 달래야 한다고 보는 대통령이 있다"고 오바마를 비판했음.
- 그는 이어 "미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힘을 갖고 독재자들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군을 줄이려고 하고 있음. 현역군을 10만명이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길"이라고 주장했음. 그는 "우리는 미국을 자유롭고 강력하고 용감한 국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나는 (집권할 경우) 10만명의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도성향으로 알려진 롬니는 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北 "美 새 국방전략으로 세계 제왕 행세"(1/30)

- 북한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 "미국은 21세기를 이른바 '미국의 태평양세기'로 만들어 세계의 제왕 행세를 하려고 있다"고 비난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세기'는 본질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판본"이라며 이같이 비난했음.



- 논평은 또 미국이 새 국방전략 발표로 예봉을 북한과 중국으로 돌렸으며 "그 목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최대의 전략적 적수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장악통제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논평은 이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탐욕과 군사적 모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이 구시대적인 지배주의적 관점과 방식으로 21세기를 저들의 맹주가 된 '태평양세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5일 국방비 예산을 감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한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美DNI "김정은, 무기수출 계속할 것"(2/1)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무기시스템 수출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획득, 공급 등을 의미하는 '확산(Proliferation)'이 글로벌 위협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탄도미사일과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의 확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클래퍼 국장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 2007년 10월 6차회담 합의를 통해 핵 물질, 기술 등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시 핵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다만 "북한은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군사적 패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미군이나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이어 클래퍼 국장은 지역별 안보위협을 설명하면서 동아시아 항목에서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권력층이 정권의 불안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단시일 내에는 응집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날 청문회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도 북한을 '전세계 위협요인(World Wide Threats)'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언급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테러 위협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에선 28세의 독재자(28-year-old dictator)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저장고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는 깊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 그는 특히 "최근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었다"면서 "북한은 정보기관이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보기관의 북한 관련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밀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음.

● "북, 美고속표적기 도입..무인공격기 개발 중"(2/5)

- 북한이 미국에서 생산된 고속표적기를 도입해 무인공격기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최근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MQM-107D'(스트리커) 여러 대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무인공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고속표적기에 고폭탄을 장착해 수차례 시험을 했으나 아직은 완성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미군과 우리 군이 사용하는 고속표적기인 MQM-107D는 유도탄의 시험 발사 때 공중 표적기로 활용되고 있음. 길이 5.5m, 날개 길이 3m, 최대 속력 925km/h로 상승 고도는 1만2천190m에 이룸. 추진기관은 제트 엔진임.
- 북한은 무인공격기를 개발하면 황해도 지역에 주둔한 4군단 소속 각군 부대에 배치해 서북도서의 우리 군부대를 겨냥할 것으로 관측됨.
- 또 러시아제 프로펠러형 무인기도 도입해 무인공격기로 개발 중이라는 첩보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는 작전거리가 60km에 이룸.
- 한편 북한은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 자체 개조해 만든 무인비행기 '방현- I·II'를 최전방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길이 3.23m, 고도 3km, 최대 시속 162km로 작전반경이 4km에 달하는 이 무인비행기는 유사시 20~25kg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는 가솔린 엔진으로 낙하산을 펼쳐 지상에 착륙함.
-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해안포 110여발을 발사한 뒤 저녁 무렵 이 무인비행기를 띄웠음.
- 우리 군은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를 이미 개발했으며, 지금은 무인표적기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北에 남겨진 식량 2만t 반환 요구"(2/5)

- 미국이 과거 식량 지원 과정에서 북한에 남겨둔 식량 2만t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5일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의 조건으로 과거 식량 지원 과정에서 지난 2009년 북한에 인도하지 않은 채 남겨둔 식량 2만t의 반환을 요구했음.
- 미국은 지난 2008년 5월, 북한에 50만t의 식량 지원 의사를 표명한 후 2009년 3월까지 17만t을 지원했음. 하지만, 북한은 2009년 3월 당시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북한에 도착했으나 인도되지 않은 채 남겨진 2만t의 식량은 현재 행방이 불투명함.



- 미국은 작년 북한에 비스킷 등 영양보조식품을 매월 2만씩 24만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2만의 식량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규 지원분에서 상쇄해 22만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조건을 북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북한은 작년 말 영양보조식품 대신 쌀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2만의 식량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식량 지원 대가로 북한에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식량 2만 반환 문제를 교섭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중·북 관계

● "中, 북한에 식량 50만t·원유 지원" <도쿄신문>(1/30)

-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에 식량과 원유의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복수의 중국·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고 지원 규모는 식량이 50만t, 원유가 25만t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김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긴급 식량·원유 지원은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하루 후인 작년 12월 20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재한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임.
-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속한 식량·원유 지원은 김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음. 식량지원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4월까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원유는 이미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지원됐다는 정보도 있음. 김정은 체제가 권력 승계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심각한 식량난을 개선하고, 국민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 축하 분위기를 고양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지도부는 이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작년 12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 식량원조를 할 것이라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조선(북한)과 조선반도 안정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은 줄곧 힘닿는 선에서 조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작년 북중교역액 56억 달러...전년比 62%↑(1/31)

-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규모는 총 56억2천만900만 달러로 전년도 34억6천400만 달러에 비해 6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31일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간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2월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는 총 31억6천500만 달러, 수입은 총 24억6천400만 달러로 집계됐음.



-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38.9%, 107.4% 증가한 것임. 북한의 대중 수출규모가 급증한 것은 석탄·철광석 등 광물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북한이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주로 원유였음.

● "北, 작년 중국서 곡물 37만t 수입"(2/2)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37만t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음.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국무역협회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해 1년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37만6천43t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31만3천695t보다 20.0% 늘어난 수치임.
- 또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비중은 옥수수가 36.1%로 가장 많고 밀가루 33.2%, 쌀 24.5%, 콩 5.4% 등 순이었음. 2010년 밀가루 36.4%, 옥수수 27.9%, 쌀 26.8%, 콩 8.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옥수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임.
- 북한이 작년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데 지출한 금액은 1억6천619만 달러로 2010년 1억1천516만 달러보다 44.3% 늘었음. 북한이 이처럼 곡물 수입량을 늘린 것은 올해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임. 권 연구위원은 "북한이 작년 4·4분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2010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12만5천700t"이라며 "작년 가을 수확량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35만5천36t(중량 기준)으로 2010년 28만7천303t에 비해 23.6% 늘었음.

● 中단둥, 북한관광 재개...외국인 급증(2/3)

- 북한 신의주 접경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관광이 재개됐다고 조선족 매체 인터넷 요녕신문(遼寧新聞)이 3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단둥국제여행사가 지난달 26일 3박 4일 일정의 북한 관광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북한 관광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단둥에서 북한 관광이 재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애도 기간이 정해져 대북 관광이 끊긴 지 한 달 만임.
- 올해 북한 관광에는 홍콩과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 온 관광객의 참여가 부쩍 늘었다고 단둥국제여행사는 전했다. 이 여행사가 올해 들어 실시한 북한 1일 관광과 4일 관광에 이미 수십 명의 외국 관광객이 참가했음. 이 여행을 통해 북한을 관광한 외국인 관광객이 2010년 50여 명, 지난해 100여 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임.
- 해마다 12월에 잠시 중단됐다가 이듬해 2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에 이미 시작됐고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는 등 북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단둥 여행사들이 다양한 북한 관광 상품을 내걸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함.



● 中지린성, 北과 교통·자원·관광협력 강화(2/5)

- 중국은 라선특구를 북한의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키로 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5일 보도했음.
-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는 이날 폐막한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린성 왕루린(王儒林) 성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북한과 교통설비, 자원개발, 국경관광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라선경제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라선개발을 위해 북한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와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지린성과 라진시는 작년 '북·중 라선경제무역구(2011-2020년)개발계획 기본 협약'을 체결했음.
- 이 계획에 따르면 북·중 라선경제무역구의 면적은 470km²에 이르며 양측은 라선의 기초시설, 산업단지, 물류망, 관광 분야의 공동개발 및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원재료 공업, 설비공업, 첨단 신기술, 경공업, 의류업, 현대화농업 등의 6대 산업종을 발전시키기로 했음.
- 라선개발을 위해 추진된 중국 훈춘(琿春)-라진항 도로 보수공사는 이미 시작돼 올해 중 완성될 예정이며 고효율 농업시범단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은 덧붙였다.

라. 일·북 관계

● 日서 '북송 일본인 처' 귀국 추진단체 설립(1/31)

- 1950~1980년대 재일동포들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뒤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일본 귀국을 추진하는 단체가 설립됐다고 NHK와 TBS 등 일본 방송이 31일 보도했음.
-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 일본 이민정책연구소장과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이주문제단체인 국제이주기구(IOM)의 관계자 등은 30일 오후 도쿄 미나토(港)구에서 모여 '일본인 처 등 정주지원센터'를 발족시켰음. 이 단체는 앞으로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나 해방 후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을 일본에 돌려보낼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맞을 시설을 일본에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기로 뜻을 모았음.
- 사카나카 대표는 최근 활발해진 북일 접촉과 관련해 "북한이 응할 수 있는 사안은 (북송) 일본인 처와 잔류 일본인 문제"라며 "일본인 처는 이미 70대나 80대 고령이 된 만큼 한시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본 니가타(新潟)와 북한 청진을 잇는 만경봉호 등을 타고 재일동포 9만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이중 1천800여명은 일본인 아내였음. 또 1945년 해방 후에도 북한 지역에 귀국하지 못한 일본인 수만 명이 남은 것



로 알려졌음.

- 사카나카 대표는 도쿄입국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뒤 퇴직한 전직 법무성 관료로 50년 안에 이민 1천만 명을 받아들여 '다민족 공생국가 일본', '큰 일본'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알려진 인물임.

● 日, 자체 인정 '납북피해자 수' 확대 시사(2/2)

-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납북 피해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시사했음.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쓰비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특정실종자) 20명을 '준(準) 인정' (피해자) 정도로 지정하겠다는 뉘앙스를 (북한에) 전하겠다"고 밝혔음.
- 일본은 1970~1980년대에 행방불명된 이들 중 17명을 납북 피해자라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뒤 북한에 귀환을 요구했음. 북한은 2002년 이 중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했지만 '8명은 죽었고,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며 남은 5명과 가족을 일본에 보냈음. 특정실종자는 이들 외에 민간단체(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납북됐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약 470여명에 이룸. 마쓰비라 담당상의 발언은 이 중 20명 정도를 납북 피해자 다음 등급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됨.
- 일본은 그동안 '납치 피해자 17명을 모두 돌려보내기 전에는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되풀이해 주장했지만, 북한의 주장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음. 최근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 외에 1959~1984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일본인 처의 귀국을 주장하거나 납치 피해자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음.
- 한편 마쓰비라 담당상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부정하면 (납북 피해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북한이나 일본이나)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다양한 계급, 단체가 접촉하고, 마지막에 외교 교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물밑 접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러·북 관계

● "北 새 지도부 가스관 사업 지지" 러 대사(2/2)

- 김정운을 중심으로 한 북한 새 지도부는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스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발레리 수히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2일(모스크바 시간) 밝혔음.
- ◇ 가스관 프로젝트 여전히 유효 = 수히닌 대사는 '외교관의 날(10일)'을 앞두고 이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세와 대외 정책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김정운을 정점으로 한 북한 새 지도부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포함, 이전에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히닌 대사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북한 석유성 사이의 실무 접촉



- 이 러시아와 한국 간 접촉과 나란히 추진되고 있다"며 가스관 건설에 앞서 여러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세부사항들을 조정, 필요한 문서들에 서명하고 3자 협상을 통해 이를 재조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가스관의 안정성 보장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음.
- ◇ 러-북 정상회담도 가능 =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북한 정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 "올해 안에 양국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새로운 고위급(정상) 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방해할 어떤 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 가까운 장래에 러-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음. 수히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몇 차례의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실무선은 물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표단 상호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에는 북한 수산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연방어업청장과 불법어업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8월 시베리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러-북 관계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며 "(이 회담에서 이뤄진) 모든 합의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 북한 정세 정상적 = 수히닌은 지도부 교체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해 "지도자 사망으로 인한 감정적 동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상적 체제 속에 살고 있으며 김정일의 70회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경제 자유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사람들은 '개혁'이나 '자유화' 등의 용어를 좋아하지 않으며 대신 '경제 개선'이란 용어를 선호한다"고 운을 뗐음. 그는 "현재 북한 지도부는 경제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북한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는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 투자를 위한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개방 조치는 아니지만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제한적 제도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 6자회담 재개 현실적 = 그는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에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현재의 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객관적 필요성에 대한 확신 성격이 강하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면서도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선의와 상식, 타협적 태도 등을 보인다면 6자협상 재개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때문에 6자회담에도 참여한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비핵화)와 관련한 합의가 상호적이고 호혜적이어야 하며 북한의 안보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



다"고 전했다.

- 수히닌 대사는 북한 새 지도부가 대마대일 관계를 개선할 전망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여러 차례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천명해 왔으며 말로만이 아니라 상당히 비범하고 용감한 행보를 취해왔다"며 "새 지도자 김정은 체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북마북일 관계 정상화 전망은 상당 부분이 미국과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바. 기타

● 유니세프 대북지원예산 9% 증액...2천200만 달러(1/31)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대북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200만 달러(9%) 늘린 2천24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31일 전했다. 유니세프 '2012 인도주의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구는 올해 북한 영양지원 사업 930만 달러를 비롯해 보건 사업 562만 달러, 식수·위생사업 642만 달러, 교육사업 100만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 작년에 비해 교육, 식수·위생사업 예산은 줄었지만, 영양사업 예산은 362만 달러 늘고 수혜대상도 630만 명에서 1천60만 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대북지원 예산 증가는 지원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영향임.
- VOA는 "유니세프는 올해 29개 군에서 중증영양실조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료활동을 전개한다"며 "지원대상 지역의 5살 미만 중증영양실조 어린이 1만3천300명에게 고단백 과자와 영양강화우유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도 유아들에게 미량영양소 보조제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유니세프가 작년 말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등 4개 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실태를 조사한 결과,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2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 北 "이집트 오라스콤 회장 평양 도착"(2/2)

- 이집트 통신 재벌인 나기브 사위리스(56) 오라스콤텔레콤 회장 일행이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사위리스 회장의 방북 목적과 체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방북 기간 북측과 휴대전화 사업 및 오라스콤사가 투자한 평양 소재 류경호텔 공사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12월 75%의 지분 투자로 북한 체신성과 합작해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설립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위리스 회장은 지난해 1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음. 한편 사위리스 회장 일행은 1일 조선컴퓨터센터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그려진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을 놓았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 美국적자 3人 김정일 사망시 MDL넘어 조문방북(2/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미국 국적의 한인 3명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조문 방북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음. 3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이사, 워싱턴타임즈 주동문 회장 등 3명은 지난해 12월24일 경의선 쪽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보다 이틀 앞서 방북 길에 오른 것임.
- 문 회장 일행은 '세계평화연합조의방문단' 명의로 "존경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생을 기원한다"는 조화를 전달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 위원장을 조문한 뒤 30일 평양을 떠났음. 귀환 경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이들의 방북 사실은 당시 북한 매체에 보도됐지만, 경로는 중국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인식됐었음. 당시 통일부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임.
- 그러나 사실은 정부가 이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더구나 정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문 방북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파장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 3명은 모두 미국 국적자라서 중국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육로를 통한 방북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음.
- 정부는 김 위원장 조문과 관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당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낸 데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은 회장 가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조문을 허용했고, 민간차원의 조문은 일체 불허했었음.

● "北 휴대전화 가입자 100만 명 돌파"(2/3)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음.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은 2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오라스콤 텔레콤은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 일행이 방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 사위리스 오라스콤 텔레콤 회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했음. 김영남과 사위리스 회장은 오라스콤 텔레콤이 투자한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 및 평양 소재 류경호텔 공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리스 회장은 작년 1월에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음.
-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 2008년 12월 75%의 지분 투자로 북한 체신성과 합작해 25년간 독점적인 사업운영권을 가진 이동통신사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음.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작년 6월 말 시점에서 66만 명을 웃돌았고 3개월 지난 9월 말에는 80만9천명으로 증가했음.
-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2011년 3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453개 기지국을 통해 평양과 14개 주요도시, 86개 소도시, 22개 주요도로 등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의 94%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사위리스 회장의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홀딩스 SAE의 주가는 북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공시에 힘입어 8영업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음. 주가는 이날 카이로 증시에서 오후 1시36분 현재 전일보다 3.6% 급등한 주당 1.16이집트파운드에 거래됐음.

● 北 '유엔 무력개입 가능' 통일연 보고서 맹비난(2/3)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유사시 북한에 유엔 차원의 무력 개입이 가능하다는 통일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내용을 들어 현정부를 맹비난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논평에서 "지금까지 '북급변사태'를 가상한 유엔의 대북군사적 개입 가능설이 일부 극우보수 언론, 전문가들에 의해 뒤골방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괴뢰정부의 정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직접 나서서 작성하고 공표한 전례는 없었다"며 "이명박 패당은 전면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희세의 전쟁광신자들"이라고 비난했음.
- 이 매체는 "괴뢰 역적배들은 어용매문지들을 내몰아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대외적 영상을 흐리게 하는 온갖 날조자료들을 유포했다"며 "통일연구원 보고서 발표놀음은 그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흡수통일' 야망을 이뤄보려고 얼마나 발악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또 "괴뢰들이 상전과 야합하여 악랄하게 벌려온 우리에게 대한 핵 소동과 인권소동, 모략 날조선전 등 반공화국 모략대결 소동은 내외여론을 호도하여 '보호책임'의 명분을 마련, 북침전쟁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조정현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작년 12월30일 펴낸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리비아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 발생할 경우 유엔 차원의 무력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北조평통 키 리졸브 연습 비난... "총선 승리 술책"(2/4)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4일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맹비난했음.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의 전쟁연습책동은 남조선 민심과 여론의 불만을 탄 데로 돌리고 보수세력을 규합해



- 당면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무난히 치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대변인은 "군사적 도발로 상대를 자극해 맞대응으로 번지면 침략의 불을 지르는 것은 호전광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연평도 포격사건도 그러한 침략적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민족의 아버지를 잃은 우리 인민의 슬픔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괴뢰 패당이 미국과 결탁해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천하의 야만행위"라며 "이명박 패당은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집단, 전쟁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키 리졸브 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월9일까지 진행되고 이번 연습에는 미군 2천100여 명과 한국군 20만여 명이 참가해 예년 수준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아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됨.

● 北도 스마트폰 앱 기술 개발 박차(2/4)

-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용 응용 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연합뉴스가 확인한 데 따르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지난달 29일 올라온 '북한의 스마트폰을 위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란 제목의 동영상에서 북한 과학자들은 그동안 북한에서는 생소했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소개했다.
- 동영상에서 북한의 최혁철 교수는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드로이드폰을 조국(북한)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안드로이드폰 카메라로 바코드를 캡처해 인식된 바코드의 형태와 수 값이 무선망을 통해 봉사기(바코드 서버)에 접속하면 봉사기에서 제품의 정보가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들어온 정보를 통해 제품의 정보와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 그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앱을) 개발함으로써 계산 정확도와 바코드 인식률을 상당히 높였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OpenCV'라는 화상처리도구를 안드로이드폰에 넣어 바코드 인식 속도도 3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 동영상은 북한에서 지난해 10월27일 개막된 '제22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됨. 전시회에서 북한 연구자들은 통신프로그램과 정확도가 향상된 음성인식 프로그램도 선보였음.
- 동영상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류광식 연구원은 "이번에 우리 대학 정보센터에서는 IP 전화봉사체계 '불'과 통합통신프로그램 '별', 전화망 음성봉사체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전시회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 이 대학의 리은철 연구원은 "이번 전시회에 조선어음성인식프로그램 '룡남산 4.5'를 개발해서 참가했다"며 "리눅스(Linux) 계열 조작체계와 Windows XP 계열 조작체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과학 여러 분야에 대해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전했다.

● "北인권개선엔 '지원+인권제기' EU방식이 대안"(2/5)

- 북한의 인권문제를 풀려면 대북지원과 인권문제 제기를 병행하는 유럽 연합(EU)의 접근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음.
- 황재옥 아시아인권센터 이사는 5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인권의식과 대응유형 연구'에서 "EU는 북한주민의 식량권과 생명권 개선을 위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조를 끌어내려고 노력했다"며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및 조선인권연구협회 설립 등 인권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도적 개입정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또 "정치대화와 수교를 통한 EU의 대북한 접근은 북한과 인권 의제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시안을 별개로 전개한 EU의 인권정책은 북한의 차별적인 협조를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음.
- 그는 EU식 접근의 성공적 사례로 북한의 형법 개정을 꼽았음. 황 이사는 "형법이 개정되던 시기에 북한은 EU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았고, 매년 정치대화를 통해 인권문제와 경제협력 등을 논의함으로써 EU는 북한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며 "형법 등의 개정은 EU 방식의 인권정책에 대한 북한의 차별적 협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EU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인권과 직접 연계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인권대화를 진행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유도했다"며 "북한에는 수교와 인도적 지원 등 개입정책을 실행하면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해 북한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야 정치적·시민적 권리까지 개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방 향한 '민간 창구' 유럽 첫 북한식당>(2/5)

-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이자 소위 '북한식 민간외교 창구'인 식당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개설했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영업 중인 북한 식당은 최소 50개가 넘지만 유럽, 이른바 서방에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 식당은 홈페이지에서 북한을 서방에 알리는 '문화센터'이자 '북한과 서방인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임을 표방하고 있음.
- 지난 2일 저녁(현지시간) '암스테르담 평양 해당화 레스토랑'을 찾아갔음. 암스테르담 남서부 변두리인 오스도르프-미텐구(區) 우베르딩엔파트 1번지, 주민회관으로 쓰이던 2층 짜리 건물에 '평양 레스토랑'이란 알파벳 간판이 걸려 있음. 초인종을 누르니 한복을 입은 아가씨가 나와 환대하며 안으로 안내했음.
- 복도와 홀 내부 벽엔 북한 미술품들이 뽁뽁하게 걸려 있음. 한쪽에 작은 피아노가 놓여 있고 벽에 걸린 LCD TV 화면엔 북한 가요 가사가 흘렀



- 음. 24개 좌석을 갖춘 내부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음. 유럽에선 수요가 적어 규모도 작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으나 300석으로 알려진 중국 베이징 해당화 식당 분점 외관과 규모, 실내장식 등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음.
- 당일 손님은 네덜란드인 젊은 남성 두 명 뿐이었음. 한명희 지배인은 지난달 28일 문을 열긴 했으나 아직은 저녁에만 임시영업 중이어서 하루에 서너 명에서 열 명 정도만 현지 신문의 개업 소개 기사를 보고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해당화 식당의 총경리(총책임자)인 한 씨는 한국 사람으로선 연합뉴스 기자가 첫 손님이라고 했음.
 - 사전에 주문한 9단계 코스 요리가 하나씩 차례로 나왔음. 오골탕, 불고기, 칠색나물, 고등어구이 등 한식과 함께 초밥과 회도 있고 감자튀김 샐러드와 굴 그라탕 등 서양식 요리도 포함돼 있음. '들쭉술' 등 북한 술은 없고 '하이네켄' 등 현지 술과 음료들뿐이었음.
 - 1인당 79유로나 받는 코스요리 치고는 일부 음식의 질이 떨어졌음. 특히 회와 초밥에 사용한 생선의 선도나 크기, 종류는 가정용 즉석 초밥용으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재료로 보였음.
 - 이렇게 영업해서는 현지인이든 한국 주재원이든 그다지 올 것같지 않은데 장사가 되겠느냐고 한 씨에게 물었음. 한 씨는 아직은 재료구입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임시 운영하면서 손님들 의견도 듣고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답했음. 오는 17일 개업식을 치른 뒤에 차츰 단품을 포함시키는 등 메뉴 구성도 달리하고 손님이 늘면 점심 영업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음식 시중을 드는 '봉사원' 아가씨 4명은 새 음식이 나오는 사이엔 홀한 편에서 노래방 반주에 맞춰 가벼운 춤을 곁들이며 '휘파람' 등 북한 노래를 불렀음. 때론 피아노로 서양 클래식 음악이나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등을 연주하기도 했음.
 - 이 식당은 네덜란드 호텔 사업가 렘코 헬링만 씨와 렘코 반 달 씨가 개설하고 북한 사람 9명이 노동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는 형태로 개업했음. 반 달 씨는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으로부터 돈을 지원받거나 별도로 주는 일은 없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인 종업원 9명에게 임금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 달 씨는 공식 직책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소유주는 아니라면서 '책임자(director)'며 한 씨 역시 '책임자(director)이자 관리자(manager)'라고만 설명했다.
 - 현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인이 사업면허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동운영의 형태로 만들었을 뿐 북한 정부가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사관 옆에 "구내 식당을 겸한 북한 식당이 개인 차원에서 잠시 운영되다 문을 닫은 적이 있으나 북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유럽에 식당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체육 당국 등 여러 기관이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화의 경우 노동당 보위부가 관리하는 곳이라면서



- 베이징 해당화 식당 책임자인 한 씨가 파견된 점으로 봐서도 암스테르담 평양 레스토랑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음. 외화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유럽에 '민간외교'의 거점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같은 분석을 했음. 또 준비는 전부터 했더라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문을 연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양 교수는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지식경제 기반 등 문명강국을 강조했다"면서 "문명강국 형성의 일환으로 씨 김정은 체제에서 확대할 시발점이 이 식당 아니겠는가 판단된다"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 표준시행약정 체결(1/30)

- 한국과 미국 간 군수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 전동운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로빈 에이킨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표준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음.
- 양국은 전쟁시 군사활동시 신속한 군수지원을 위해 1988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음. 그동안 해당 부대분야별로 매년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해왔으나 이번 표준시행약정 체결로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됐음.
- 표준시행약정은 군수 지원과정, 업무담당관,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활동시 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음. 국방부 관계자는 "표준시행약정 체결로 훈련, 작전, 교육 등 임무수행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호군수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육군 부사관, 美8군 부사관학교서 위탁교육(1/31)

- 육군 부사관 65명이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 8군 부사관학교에 입교해 4주간의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육군이 31일 밝혔음. 미 8군 부사관학교는 미군을 대상으로 전사리더과정과 교관훈련과정, 카투사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육군은 전사리더과정에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분대장 및 부소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우수 부사관 50명을, 교관훈련과정에는 부사관학교 및 육군훈련소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 중인 훈련부사관 중 15명을 각각 선발해 교육하기로 했음. 선발된 부사관들은 입교 전에 전화 영어와 온라인 어학강좌를 통해 영어를 익히고, 입교해서는 미군과 함께 교육을 받음.



- 육군본부 능력개발교육과장 정영기 대령은 "미군의 실전적인 전투기술과 교육훈련 기법을 배워 전투전문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안정적인 위탁교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군, 美 '레드 플래그' 훈련 종료(2/5)

- 미 공군이 실시하는 최대규모 공중전 훈련인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이 5일 마무리됐다. 지난달 22일부터 미국 네바다주 벨리스 기지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 공군이 참가했다.
- 2008년 이후 4년 만에 참가한 한국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 F-15K 6대를 비롯해 20여 명의 조종사를 포함해 80여 명의 장병을 파견했다. 이들은 훈련기간 총 60여 소티(차례) 출격을 통해 연합 작전 훈련을 소화했다.
- 특히 미 적기 전담대대에 맞서 미국, 사우디와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이뤄 항공차단과 근접항공지원작전 등 고난도 연합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 적의 가상 레이더 등 주요 거점을 식별해 무력화시키는 첨단 무장 실사격 훈련에는 레이저유도폭탄(LGB),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유도 JDAM 등이 동원됐다. 공군은 8~16km밖에 위치한 가상표적을 정확히 명중, 실력을 입증했다.
- 훈련에 참가한 F-15K 중 3대(54~56호기)는 점검을 마친 후 오는 14일 11전투비행단에 도착할 예정이다. 제작사인 미 보잉사 시험비행조종사들이 공중급유를 통해 한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병력은 오는 8일 민항기를 이용해 귀국할 계획이다.
- 훈련단장 윤재훈 대령(11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규모 전력의 전개와 고난도 항공작전수행, 원거리 군수지원과 현지에서의 정비무장지원 등을 통해 팀워크와 연합 작전수행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 미국 훈련단장 피걸 토드 대령은 "3국의 굳건한 동맹관계와 연합작전능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 공군은 이번 훈련 성과를 분석해 2013년부터는 매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해외훈련 참가와 유사시 대비한 공중급유 훈련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나. 한·중 관계

● 李대통령 "中 지도부, 한국에 투자 계획"(2/1)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윈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시 덕충동 여수엑스포조직



- 위원회에서 열린 사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후 주석과 원 총리가 한국 투자를 해야겠다고 했다"면서 "중국은 두 사람이 얘기하면 실제 일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젠다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한국 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중국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투자만 했다"면서 "(중국의 한국 투자 계획의 이면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려는 기업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기업들이 어렵지만 일자리를 확보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를 해줘야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한편으로 기업들이 기업 윤리나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는 요청사항이 있다"면서 "기업들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잘해서, 기업 문화를 좀 바꾸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생존권과 관련돼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으면서 한편으로는 (해외에) 진출하도록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中환구시보, '韓해경 中어민 구타' 억지 주장(2/3)

-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한국 해경이 저항하지 않는 중국 어민들을 야만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한국 정부의 반론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국 어민들의 목소리만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구시보와 이 신문의 인터넷판인 환구망(環球網)은 지난 1일부터 사흘 연속 한국 해경이 자국 어민들에게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 환구망은 어민들의 말을 인용해 저장성 선적 어선 저타이(浙台)32066호가 1월 17일 오후 3시께 제주도 남쪽의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갑자기 해경의 '기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저타이호 선장은 왕(王)모 씨는 "다른 선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고 조타실에 혼자 있었는데 경고 없이 갑자기 배에 오른 해경들이 폭행해 혼절했다"고 말했다.
- 환구시보는 해경이 총까지 사용하면서 어민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모두 3명의 어민이 실신하는 등 크게 부상했다고 전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저타이호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어업 허가증까지 갖고 있었다면서 '불법 조업' 혐의도 부인했다.
- 이에 대해 주중 한국 대사관은 환구시보의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 대사관이 3일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 매체에 배포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저타이호는 그물 운반선으로 어업허가증을 받았지만 나포 당시에는 허가증을 부착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있었음.



- 불법 조업을 의심한 해경 3002함이 3차례 정선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자 해경 대원들이 소형 단정을 타고 접근을 시도했으나 도주를 계속했다는 것임. 대원들이 승선한 뒤에도 중국 선장과 선원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았음. 선원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하면서 해경은 강제 진압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선원 3명과 해경 대원 2명이 각각 부상했음.
- 주중 대사관 측은 해경 대원이 총기를 발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고 목적으로 단속 수칙에 근거해 선원들을 향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나포 후 조사 결과 그물 운반선인 저타이호에는 다른 중국 어선들이 잡은 5천kg의 콩치가 실려 있었음.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르면 그물 운반선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한국의 EEZ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 자체가 불법임.
- 이에 따라 해경은 중국 선주로부터 8천만원의 담보금을 송금받고 나서 1월 25일 저타이호를 중국으로 돌려보냈음.
-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환구시보는 한국 측 주장을 '역지 주장'으로 일축하면서 '도둑(한국 해경)이 도둑(중국 어민)을 잡으려고 고함을 친다'는 원색적인 표현을 대거 써가면서 반한 감정을 부채질했음.
- 사정을 자세히 알 길이 없는 중국 네티즌들은 환구시보의 보도 내용에 자극받아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분위기임. 다만 한국 대사관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환구시보를 제외한 다른 중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음.
- 환구시보는 공산당 기관지를 발행하는 인민일보사의 자회사임. 이 신문은 인민일보사의 후광을 업고 '관영 매체'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업화된 강경 민족주의' 성향을 보여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음.
-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국 해경이 주권을 제대로 집행한 사안"이라며 "해당 어민들이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해경에 저항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음.

다. 미·일 관계

● "美-日, 이르면 내주에 TPPA 사전협의 시작"(2/1)

-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내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사전협의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7일과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실무협의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일본에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재무성 국장급 관료가 참가하고 미국에선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와 백악관 통상 팀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사전 협의에서 일본의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USTR는 2~6개월 정도 사전 협의를 거쳐 자국 의회에 일본



의 참가를 통보할 전망이며, 통보 90일 후에 일본의 참가가 인정됨. 앞서 TPPA 협상에 참여하는 9개국 가운데 호주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일본 측에 사전협의 의향을 전달했고,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추측됨.

● 日, 이란 제재법 적용 예외 인정될 듯(종합)(2/3)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조치에서 자국 은행들을 예외로 해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3일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대가로 일본 은행이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음.
- 겐바 외무상은 이날 미국과의 2차 회담 결과를 묻는 말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확고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얼마나 줄일 준비가 돼 있는 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고 말했음. 또 일본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우에무라 쓰카시(上村司)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심의관도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당국자 회담을 마친 후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음.
- 우에무라 참사관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음.
- 미국이 새로 마련한 이란제재법에 따르면 원유 수출을 결제하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됨. 그러나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할 때 "전체 원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음.
- 우에무라 참사관은 앞서 회담에서 지난 5년간 이란산 원유 수입이 40%나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자국 은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음.
-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0%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美日, 오키나와 美해병대 괄 이전 축소 협의(2/4)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음.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3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천 명과 가족의 괄 이전과 관련, 기존 미일 합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미국 측은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괄 이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양국 협의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음.
- 미국과 일본은 애초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약 8천 명과 가족을 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약 4천50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를 호



- 주와 필리핀의 미군 기지로 순회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겐바 외상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 계획 재검토와 함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도 유연성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로 한 미일 합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음.
 - 이와 관련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경비 절감을 위해 후텐마 기지 이전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하지만 겐바 외상은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기로 한 일미 합의가 최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 美日, 오키나와 해병 괄 이전·후텐마 분리 합의(2/5)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괄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음.
-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NHK방송 등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괄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 등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음.
- 이에 의하면 양국은 해병대의 괄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패키지로 했던 기존 합의를 수정. 해병대 이전과 후텐마 이전을 분리하고 해병대의 괄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음.
- 양국 정부는 6일부터 워싱턴에서 심의관급 협의를 통해 이런 방침을 확인한 뒤 13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임. 양국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천 명과 가족을 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2006년의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을 수정해 이전 규모를 4천700명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
- 나머지 3천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미 기지로 로테이션 식으로 파견할 방침임.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 명 규모가 됨.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한 현행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음.
- 양국이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수정한 것은 후텐마 기지 이전이 오키나와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져 해병대의 괄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임. 또 괄으로 이전하는 해병대의 규모를 축소해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의회의 군비 대폭 삭감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미 정부의 생각이 깔려있음.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은 줄어들지만, 미국이 후텐마 기지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이전 계획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임. 오키나와 지자체와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음. 결국,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설득에 실패하고, 대체 이전지를 찾



지 못할 경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일본은 작년 가을부터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의 재검토를 위한 실무급 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12월부터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본격적인 협의를 벌였음.

● 美, 日에 "후텐마기지 계속 사용 불가피"(2/5)

-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沖縄)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현상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음.
-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말 오키나와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 "후텐마 이전 문제의 조기 타개가 곤란한 만큼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음. 이는 후텐마 기지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기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어서 현 외 이전을 요구하는 오키나와의 반발이 예상됨.
- 미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후텐마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미일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미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말 한국의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 당국 고위관계자 협의 당시 일본 측 참석자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음. 미국은 후텐마 기지의 계속 사용을 기대하면서 보수 공사도 계획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은 2006년에 합의했던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을 수정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음.
- 또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천 명과 가족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을 축소해 4천700명만 이전하고, 나머지 3천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미 기지로 로테이션 식으로 파견할 방침임.

라. 중·일 관계

● 中외교부, 日 댜오위다오 부근섬 "작명"에 항의(1/31)

- 중국 정부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부근 무인도에 일본식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에 항의했음.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30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작명(作名)' 시도와 관련해 엄중한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지난 16일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댜오위다오 부근 섬 작명 계획을 밝힌 후 보름이 지나고서 기자의 질문에 외교부 대변인이 답하는 형식을 택했음. 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부근의 섬 39곳에 대해 이름을 붙여 오는 3월 말까지 일본의 지도상에 해당 지명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일방적인 조치는 불법일뿐더러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댜오위다오와 부근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음.

- 앞서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7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에서 "(일본은) 중국의 주권 수호 의지와 결심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며 "다오위다오 부속 도서에 이름을 붙이려는 기도는 명백히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언급했음.
- 일본 정부가 다오위다오 부근 무인도에 대한 작명 시도를 하는가 하면 근래 다오위다오에 일본 지방의회 의원 등의 기습 상륙을 하는 등 '도발'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전과는 달리 '저강도 대응'을 한다는 지적임.

● 日, 中 동중국해 가스전 단독개발에 항의(2/1)

- 일본 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단독개발에 항의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 대상인 동중국해의 가스(중국명 텐와이텐·天外天) 가스전의 채굴 시설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음. 일본 정부는 이 불꽃이 채굴된 천연가스를 태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중국에 의한 단독 개발로 의심된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외무성에 항의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영토 경계 획정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방적 개발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음.
-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08년 6월 동중국해 북부에 있는 아스나로(掇檜·중국명 룡징·龍井) 주변 해역을 공동 개발하고,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에 일본 기업이 출자한다는 등에 합의했으나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동중국해 텐와이텐 주변 해역의 경우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단독 개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교섭은 2010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임.

마. 기 타

● 러 외무 "쿠릴열도 문제 국민투표 부쳐야"(1/30)

- 러시아에서 일본과의 영토분쟁 대상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음. 러시아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전날 일본 NHK TV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 방문 중 한 인터뷰에서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발 한발, 벽돌 하나씩을 쌓아가며 신뢰를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의 '베'를 짜가면서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음. 그는 그러면서 "러시



- 아의 경우 어떻든 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해결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었음.
-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일부러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해결을 오랫동안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한 번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새로 들어서는 일본 정부가 매번 '우리 정권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고 싶은 유혹을 느끼면 이는 (일본) 사회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반대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양국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영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세계 제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러, 한국 차기전투기 사업 입찰 포기한 이유는>(1/31)

- 러시아가 한국 방위사업청의 차기 전투기(FX) 도입 3차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가 출품하려던 5세대 전투기 T-50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미국 전투기를 선호해 러시아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이 31일 지적했음.
- 한국 방사청은 73억 달러(약 8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F4와 F5 등을 대체할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3차 사업을 추진 중임. 애초 30일 서울 용산 방사청 회의실에서 열린 FX 사업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러시아 수호이사는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음.
- 이와 관련 수호이사가 포함된 러시아 '통합항공기제작사(OAK)' 관계자는 이날 현지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처음부터 T-50을 입찰에 참가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T-50이 아직 개발 단계로 겨우 3대의 시험 모델만 제작됐을 뿐 아니라 설계 내용도 극비에 속해 국제 입찰에 참가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 전투기를 외면하고 러시아제 전투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국제무기거래분석센터' 소장 이고리 코로트첸코도 T-50의 수출품 본격 생산이 2017년부터나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 측이 요구한 2016년 납기를 맞출 수 없었다고 지적했음. 그는 그러면서 T-50 개발에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와 250대의 T-50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한국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전투기 개발에 어떤 차질을 빚을 이유가 없다는 것임.



- 코로트첸코 소장은 또 예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한국이 미국 기종을 선호해 러시아제 전투기를 선정할 확률이 낮은 것도 입찰 포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2년 한국 공군의 전투기 구매 입찰에서 미국 F-15 전투기가 선정되고 러시아제 수호이(Su)-35가 떨어진 사례를 들었다.
-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 5세대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T-50은 올 연말까지 비행 실험을 마치고 2015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러시아는 T-50이 미국이 운용 중인 F-22보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훨씬 뛰어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러시아의 T-50이 입찰 참가를 포기하면서 한국 FX 도입 사업에선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 중국방부 "이달 초 서태평양서 해군 훈련"(2/4)

- 중국 해군이 이달 초순 서태평양에서 정례훈련을 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3일 확인했다. 국방부는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해역을 항해할 자유를 갖고 있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훈련 일정과 구체적인 훈련 해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앞서 일본 언론은 같은 날 중국 해군 함정 4척이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해역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도 서태평양에서 해군 훈련을 했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